



보도시점 2024. 2. 7.(수) 석간 누리망·방송 2024. 2. 7.(수) 06:00

2024년 경찰청 주요 정책 추진계획

-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에 역량 집중

- ① **(국민체감 약속 4·5호)** 「변종 사기 바이러스, 경찰백신으로 근절」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도박, 뿌리까지 척결」 추진
- ② **(민생정책)** △ 여성·아동 대상 범죄 가해자에 대한 예방적 제재 강화,
△ 음주·난폭 운전 척결로 도로 위의 평온한 일상 확보
- ③ **(경찰력 운용)** 기동순찰대, 형사기동대 등을 활용,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경찰력 집중, 범죄예방·대응 강화로 국민불안 제거

경찰청은 2024년 최우선 정책목표를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로 설정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민생치안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①사기범죄 근절, 도박범죄 척결을 ‘국민 체감약속’으로 선정해 역량을 집중하고 ② ‘여성·아동 범죄 가해자에 대한 예방적 제재 강화’, ‘음주·난폭 운전 척결로 도로 위 평온을 확보’하는 한편, ③신설조직을 활용, 치안 수요에 따른 탄력적·집중적 경력 운용으로 범죄예방과 대응에 중점을 두어 경찰조직을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체감 약속 4·5호: 신종 사기범죄 근절, 도박행위 척결

먼저, 경찰은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초래하여 서민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일상에 위협을 가하는 ‘신종 사기범죄’, ‘도박범죄’ 척결을 국민체감 약속 4·5호로 각각 선정하고 올 한해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① 국민체감 약속 4호: 변종 사기 바이러스, 경찰 백신으로 근절

윤희근 경찰청장은 취임 직후인 2022년 8월 ‘악성사기 근절’을 국민체감 약속 1호로 지정하고, 전세 사기·전화금융사기 등 7대 악성사기 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수사를 펼친 결과, 악성사기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감소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 * ① 전세 사기 ② 전기통신금융사기 ③ 가상자산 유사수신사기 ④ 보험사기 ⑤ 사이버사기 ⑥ 투자·영업·거래 등 기타 조직적 사기 ⑦ 다액 피해사기

< 2022년 국민체감 1호 약속: 악성사기 근절 주요 성과 >

- ▶ 전화금융사기 발생 건수 13%↓(21,832건→18,902건), 피해액 18%↓(5,438억→4,472억)
- ▶ 7대 악성사기 총 47,445건 59,678명(구속 4,020) 검거 / 전세사기 18개 조직 검거 등

하지만, 경제적 부를 우선시하는 사회적 흐름과 온라인·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맞물려, 사기범죄 수법 역시 △투자 리딩방 사기 △가상자산 금융사기 등으로 전문적이고 치밀하게 진화하면서 국민적 피해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바이러스처럼 변이되는 사기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체감 약속 1호(악성사기 근절)를 한 차원 발전시켜, ‘민생침해 신종 사기범죄* 근절’을 국민체감 4호 약속으로 지정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 투자리딩방 사기, 가상자산 금융사기, 미끼문자 등 스미싱, 연애 빙자 사기 등

경찰청은 ‘사기범죄와의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경찰청의 관련 기능을 총동원하여 ‘예방 → 수사 → 추적·검거’ 등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범죄를 발본색원할 계획이다.

<민생침해 사기근절 2.0 운영(안)>

- ▶ (예방) 전국 시도청 형사기동대 활용 첩보 수집<강력> 예방 홍보<홍보> 등
- ▶ (수사) 민생침해 사기범죄 집중 검거계획<경제, 강력>, 통합신고대응센터 활용 자료분석·공유<경제>, 가상자산 자금 추적<사이버>, 해외 수사자료 요청<사이버>
- ▶ (검거) 사기범죄 추적 수사 전담팀 운영<경제, 강력>, 해외 거주 피의자(수배자 등) 여권 행정제재<국제공조>, 외국 법집행기관 합동 단속<수사, 형사, 사이버, 국제공조>

아울러, 진화하는 사기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범죄 신고 내용을 수집·분석해 사기 유형 및 수법 변화를 파악·분석한 후, △범행에 사용된 전화번호·계좌 등을 차단하고 △국민에게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는 사전적 예방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러한 사기 예방 순찰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토록 하는 ‘사기방지기본법’이 2024년 치안 관련 1호 민생법안으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사기방지기본법 국회 법사위 계류 중

- △사기범죄 정보 수집·분석 △피해 예·경보 발령 △관계기관 통보 통한 사전예방 △범죄 의심 전화번호 차단 등을 수행하는 사기통합신고대응원 설치를 규정

② 국민체감 약속 5호 :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도박, 뿌리까지 척결

도박은 불법에 ‘인생을 베팅’ 하고, ‘사회적 고립’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일상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현재, 국내 도박 인구는 약 237만 명으로 추정되며(전체 인구의 5.5%), 이는 세계 주요 국가와 비교해도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 미국 1.5%, 영국 2.5%, 프랑스 1.3%, 호주 3.7%(2020년), 스웨덴 1.3%(2021년)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 2022. 사행산업 이용실태조사

특히, 최근 들어 누리소통망·앱 등 온라인상의 도박이 활발해지면서 ‘손안의 카지노’에 누구나 손쉽게 접속할 수 있게 되었고, 호기심이 풍부하고 절제력이 부족한 청소년을 중심으로 사이버도박 확산세가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검거(2023. 9.~2024. 1.) 총 507명 검거

이에 경찰은 국민체감 약속 5호를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도박, 뿌리까지 척결’로 지정하고, △청소년 사이버도박 △홀덤โป๊กเกอร์ 등 변종업소 척결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청소년 도박과 관련하여 청소년은 성인보다 중독에 빠져드는 속도가 빠르고, 협박·절도·금품갈취와 같은 범죄로 발전할 위험성도 높아 피해와 부작용이 대단히 심각한 만큼, 도박에 접근할 가능성과 기회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청소년 표적 불법 콘텐츠 사이트, 개인방송 플랫폼을 통한 도박 광고 등을 집중적으로 삭제·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외에서 암약하는 불법 사이트 운영자 및 범죄 조직에 대해서는 강력한 추적·검거와 함께 범죄수익 환수·피의자 송환 등 전방위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홀덤펍·보드게임 카페’ 등 합법을 가장한 신종업소가 상습도박 창구로 변질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범정부 전담반(TF)과 연계하여 도박 개장죄 적용 등 전방위적 근절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 범정부기관이 참여하는 「홀덤펍 불법대응 전담반(TF)」 구성(2023. 7.) 공동 대응(전담반 구성 기관: 경찰청, 사감위, 문체부, 식약처, 여가부)

(민생정책) △ 여성·아동 대상 범죄 가해자에 대한 예방적 제재 강화,
△ 음주·난폭 운전 척결로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

국민의 일상생활 안전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서도 경찰 역량을 집중해 국민이 불안함 없이 평온한 일상을 지켜나갈 계획이다.

(여성·아동 대상 범죄) 스토킹·가정폭력 등 국민 체감안전과 밀접한 여성·아동 대상 관계성 범죄에 대해서는 그간의 피해자 보호에서 한 걸음 나아가 가해자에 대한 예방적 제재를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체계를 전환한다.

관계성 범죄는 재범률이 높고 강력범죄화가 되기 쉬워,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인 만큼, △보복범죄와 같이 재범 우려가 있는 가해자는 스토킹 처벌법·가정폭력처벌법상 잠정 조치와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해 피해자로부터 격리를 강화하고 △지난 1월 12일부터 시행된 스토킹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제도도 조속히 안착 하도록 법무부와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 스토킹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 결정 주요 사례 >

- ▶ 잠정조치(접근금지) 결정을 받았음에도 전 연인에게 전화를 걸어 스토킹 행위 지속
- ▶ 전 연인의 주거지 및 직장 등 지속적으로 찾아가고 문자·누리소통망을 통해 연락, 잠정 조치 4호에 따른 유치장 유치 종료 후 4시간 만에 재접근

또한, 경찰 단계에서 가해자에 대한 교정을 강화하기 위해 판사가 결정하는 가해자 대상 상담 위탁 제도를 경찰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고위험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 보급 확대(2023년 1,200대 → 2024년 1,400대) △민간경호 지원사업 활성화(2024년 100명 보호 예산 확보)를 통해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도로 위의 평온한 일상 확보) 대다수 시민이 일상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도로 위의 안전 확보’에도 주력한다.

음주운전·고위험 난폭운전 등은 법질서를 준수하며 일상을 영유하는 국민의 평온한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인 만큼 강력한 단속·처벌과 함께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도 힘써 나가기로 했다.

재범률*이 감소하지 않고 있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빈발하는 시기·장소에 대한 집중단속과 함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 치사상죄 적극 법률적용 △상습위반자 차량 압수 △동승자 방조 행위 엄정 수사 등 제재를 강화하고,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의무화(2024. 10. 25. 시행)에 대한 대비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 (음주 재범률) '19년 43.7% → '20년 45.4% → '21년 44.5% → '22년 42.2% → '23년 43.4%

아울러, 난폭운전에 대해서는 암행순찰차를 적극적으로 운용하여 단속하고, 마약사범과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 운전면허 적성검사 강화 >

- ▶ (대상확대) 전체 마약사범 및 심장·뇌질환·치매 등 대상 질환의 범위 확대
- ▶ (선별강화) 허위신고자 처벌 등 자기신고 보완, 경찰관 등 제삼자 검사의뢰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등을 탄력적·집중적으로 활용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 필요한 시점에 경찰력을 집중

그간 경찰은 지역경찰, 수사, 형사, 교통 등 각 분야에 전문화된 조직 외에, 비정형적인 치안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하다 보니, 예상치 못한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거나, 갑작스러운 다중운집 상황 발생과 같이 집중적인 경찰력 투입이 필요한 경우 효과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 신림역·서현역 사건 등 연이은 이상동기범죄로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지자, 가용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특별치안활동을 전개한 바 있으나, 이런 상황이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될 경우, 현장의 과도한 부담은 물론 다른 분야의 치안 공백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 8. 4.~10. 3. 범죄취약지역 하루평균 4,016개소 대상 하루평균 17,234명 배치

하지만, 경찰은 지난해 단행한 조직재편으로 현장치안 유지의 핵심인 지역경찰 인력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기동순찰대(28개 대 2,668명), 형사기동대(16개 대 1,335명) 등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한 조직이 신설된 만큼,

이들 조직을 활용하여 치안 수요와 국민적 요구에 따라 경찰력을 집중해 나가는 방식으로 경찰력 운용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연이은 흉악범죄 발생으로 범죄 불안감이 고조되거나 지역축제 등 치안 수요가 급증하는 경우, 기동순찰대나 형사기동대를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지역경찰 등 기존 조직과 연계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학교 밖 폭력 우려 지역, 조직폭력 우범지역과 같이 지역별 치안여건에 부합하는 치안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여 국민 불안을 선제적으로 제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활동 예시 >

- ▶ 이상동기범죄, 흉악범죄 발생 등 범죄 불안감 고조 시, 기동순찰대 집중 투입
- ▶ 마약 확산, 조직폭력 세력 과시 지역에 형사기동대 집중, 첩보 수집 및 인지 강화
- ▶ 핼러윈데이, 지역축제 등 치안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지역에 선제적 예방 활동
- ▶ 수배자 검거, 조직폭력 등 우범지역, 학교 밖 폭력 우려 지역 등 지역 여건 고려한 치안 활동

특히, 경찰은 최근 정치인 피습으로 국민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선거기간에 유세장 안전 확보, 주요인사 위해 방지 등에도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국민생활 주변을 파고드는 범죄와 사고에 대한 예방과 대응 역량을 높여 국민이 일상을 마음 놓고 영유토록 하는 것이 민생치안의 기본이자 핵심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 를 2024년의 최우선 목표를 설정하고 국민체감 약속을 중심으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치안 활동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 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총괄)	기획조정관실 혁신기획조정담당관	책임자	총 경	어윤빈	(02-3150-2002)
		담당자	경 정	박상민	(02-3150-2702)
담당 부서 (국민체감 4호)	수사국 경제범죄수사과	책임자	총 경	강태영	(02-3150-2037)
		담당자	경 정	김현수	(02-3150-2168)
담당 부서 (국민체감 5호)	수사국 사이버범죄수사과	책임자	총 경	함영욱	(02-3150-1605)
		담당자	경 정	이여정	(02-3150-1658)
담당 부서 (여성·아동 범죄 관련)	생활안전교통국 여성안전기획과	책임자	총 경	박준성	(02-3150-0830)
		담당자	경 정	이광열	(02-3150-0838)
담당 부서 (교통범죄 관련)	생활안전교통국 교통기획과	책임자	총 경	이서영	(02-3150-2051)
		담당자	경 정	이창민	(02-3150-2151)
담당 부서 (기동순찰대 관련)	범죄예방대응국 범죄예방정책과	책임자	총 경	임성순	(02-3150-2046)
		담당자	경 정	임성식	(02-3150-2146)
담당 부서 (형사기동대 관련)	형사국 강력범죄수사과	책임자	총 경	김근준	(02-3150-2070)
		담당자	경 정	임인수	(02-3150-2170)